

‘곶시장 1호 결재’ 8대 과제…3개 완료·5개 진행

‘통합 100일 실행계획’ 이행 점검

지역화폐·광역버스·응급의료 가시화
조례 정비·공공기관 통합 등 ‘진행형’
균형발전기금·에너지공사 설립 속도
노인복지·육아 서비스 이용범위 확대
군공항·반도체·의료 후속 절차 과제

민행매 전담광주통합특별시장 취임 첫날 제1호로 결재한 ‘통합 100일 실행계획’ 8대 과제 가운데 3개는 당초 목표를 달성하고 나머지 5개

는 후속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 시장은 8일 광주청사에서 특별시 출범 100일 기자회견을 열어 “통합 100일 실행계획 8대 과제 중 지역화폐 특별할인과 광역버스 운행, 응급의료통합플랫폼은 실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통합 100일 실행계획은 출범 초기 시민들이 통합에 따른 변화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 과제들이다.

현재 8대 과제 가운데 조례 정비와 공공기관 통합, 균형발전기금 설치에 관련 절차를 밟고 있으며 새로운 상징체계인 CI와 전남광주에너지공사 설립은 일정 또는 추진방식을 조정하고 있다.

민 시장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특별시에 맞는 방식으로 제대로 추진하려는 것”이라며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통합 이후 지역별로 나뉘어 있던 생활서비스의 이용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특별시는 노인복지타운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찾아가는 행복버스 등의 이용 범위를 확대했고 일자리, 청년, 관광 분야의 정보화 서비스도 하나씩 연결하고 있다. 다만 옛 광주와 전남에서 각각 운영하던 사업과 제도를 하나로 조정하는 작업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조정 대상만 3천개에 육박하는 만큼 순차적인 통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 시장은 “이런 모든 사업을 조정하는 것은 무려 3천가지 가까운 내용이 조정 대상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순서를 밟고 있다”며 “시민의 일상이 조금씩 달라지는 동안 공직사회도 빠르게 하나가 돼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CI는 시민 의견을 추가로 반영해 완성도를 높

이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특별시는 당초 공모를 진행했지만 적합한 안을 찾지 못했고 이후 디자인진흥원 등을 통해 별도의 안을 마련했다.

현재 자문위원회 등의 자문을 거쳐 지난달 말 기준 3가지 안이 상정된 상태로 시민 선호도 조사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특별시는 지난 100일간 통합을 계기로 장기간 이어진 현안과 산업 분야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은 이전 후보지 선정까지 진행됐으며 무안 국가산단을 비롯한 지역 발전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출범 이후 첫 국가 공모사업인 1천400억원 규모의 양자 클러스터를 유치했고 광양만권은 645만평 규모의 국가첨단전략산업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됐다. 총사업비

는 5천300억원, 기업 투자 규모는 약 10조원이다.

주요 현안을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인 무안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구체화하고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전력·용수·교통 등 기반시설을 조기에 구축해야 한다.

민 시장은 “행정의 경계가 없어지니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넓어졌고 해법을 찾는 시간은 짧아졌다”며 “이것이 지난 100일 동안 우리가 확인한 통합의 힘”이라고 말했다. 이어 “옛 광주와 전남에서 각각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모아 현안에 대응하는 역량이 기대했던 것 이상”이라며 “지난 100일 동안 시작한 변화와 제도를 시민의 삶에 더 단단히 뿌리내리도록 해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변은진 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취임 첫날 제1호로 결재한 ‘통합 100일 실행계획’ 8대 과제 가운데 3개는 당초 목표를 달성하고 나머지 5개는 후속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기본소득 16개 군 확대 연 1조2천억 필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실시를 위한 단계별 확대 방안과 재원 마련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취임 첫날 제1호로 결재한 ‘통합 100일 실행계획’ 8대 과제 중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실시 가능성에 대해 8일 오후 전남청사에서 ‘2027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실시 가능성’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강광석 특별시장의회의 의원(진보당·강진)은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이에 필요한 예산 규모를 제시했다.

강 의원의 추계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 16개 군 주민 약 67만명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할 경우 연간 1조2천억여원이 필요하다. 국비 50%, 특별시비 25%, 군비 25%를 각각 부담하는 구조를 적용하면 특별시 부담액은 약 3천200억원으로 추산된다.

대상을 인구감소지역 16개 군에 무안군까지 확대하면 연간 소요액은 1조3천800억원으로 늘어난

시의회 ‘2027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토론회’

인구감소지역 67만명…市 부담 3천20억

군 1천510억…무안·음면 포함 1조8천억

재원 확보 과제…지역 간 형평성 고려해야

다. 여기에 시 지역 읍·면과 광주 일부 지역인 광산구·북구까지 포함할 경우 필요한 재원은 연간 1조8천3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강 의원은 전면 실시를 위해서는 국비 지원 비율을 높이는 한편 관련 법률과 조례를 마련하고,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에서는 전면 실시에 앞서 진행 중인 시범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철환 농어촌기본소득운동 전국연합 사무총장은 시범사업 과정에서 나타난 지역화폐 사용처 부족 등 주민 불편과 제도 운영상의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련 법률 제정과 주민공론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순 전남연구원 농수산해양연구실 연구위원은 지방재정 부담과 지역 간 형평성, 정책 효과 검증, 지속가능한 재원 마련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특히 일부 시범사업 지역에서 인구 증가와 소비 확대 등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이를 모두 농어촌기본소득의 직접적인 효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심문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회장은 농어촌기본소득이 주민들의 의류비와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전남광주에서는 현재 곡성·신안·구례·보성 등 4개 군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최명진 기자

전남광주시의회, 첫 시정·교육행정 점검

12-15일 시장·교육감 상대 주요 현안 질의

의원 38명, 정책 대안·개선 방향 등 제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취임 첫날 제1호로 결재한 ‘통합 100일 실행계획’ 8대 과제 가운데 3개는 당초 목표를 달성하고 나머지 5개는 후속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광주특별시장의회의는 지난 7일 제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23일까지 17일간의 회기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장·교육행정 질문을 비롯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과 각종 안건을 심사·처리한다.

특히 오는 12-15일 나흘간 진행되는 시장·교육행정 질문에는 의원 38명이 나서 민행매 시장과 김대중 교육감을 상대로 특별시의 주요 정책과 현안을 점검한다. 시장과 교육행정 전반의 문제점을 짚고 정책 대안과 개선 방향도 제시할 계획이다.

시장·교육행정 질문은 시의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공개되며 일부 일정은 MBC와 KBC 지상파 방송으로도 생중계된다.

송형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통합에 대한 시민 기대가 큰 만큼 이제는 일자리와 교육, 의료, 교통 등 일상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성과를 보여줘야 할 때”라며 “어느 지역도 소외되지 않는 균형발전을 통해 통합의 성과를 증명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기관을 나누는 데 그쳐선 안 되고 지역의 실질적인 성장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지역 특화산업과 기존 인프라를 연계하고 지역 간 발전 격차와 인구감소 문제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송 의장은 “주요 정책과 현안을 꼼꼼히 살피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통합의 성과가 32만 특별시민의 일상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의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명진 기자

임문영 “광주에 ‘AMD AI 연구·혁신센터’ 설립”

리사 수 CEO에 친서…연구·실증 제한

더불어민주당 임문영 국회의원(전남광주 광산구)은 8일 “글로벌 반도체 기업 AMD의 리사 수(Lisa Su) 최고경영자(CEO)에게 광주 AI 연구·혁신센터 설립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광주에서 추진 중인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와 기존 AI 인프라에 AMD의 첨단 기술을 접목해 국내 AI 반도체 기업과 글로벌 기업이 공동 연구

·실증하는 협력 거점을 구축하지는 구상이다.

임 의원은 전남 리사 수 CEO에게 친서를 보내 광주에 AMD의 AI 연구·혁신 거점을 마련하고 광주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AICA), 국내 AI 반도체 기업, 광주과학기술원(GIST) 등과 공동 연구·실증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 지난 3월19일 서울에서 이뤄진 리사 수 CEO와의 만남을 구체적인 협력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변은진 기자

~2025 대통령 표창 수상단체~

대한 나눔연맹

KOREA SHARING FEDERATION

나이 든다는 이유로 '외로워'져야 할까요?

누군가의 부모였고,
누군가의 가족이었던 어르신들,
이제는 우리가 그분들의 곁을 지켜드릴 때입니다.
노인의 날, 어르신을 위한 나눔에 함께해주세요

월 2만원

< 혼자가 아닌 하루 선물하기

후원문의 1811-1004

ARS 무기명후원 060-708-1004 (1만원)

전국천사무료급식소

전국 26개 천사무료급식소 운영

(사)한국나눔연맹

34년간 정부지원 없이 나눔활동